

# '박근혜 · 최순실 · 이재웅' 파기환송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에 대해 '승마지원' 등 뇌물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다만 대기업 상대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 강요는 없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유라(23)씨

대법원, "말 뇌물은 확정" 영재센터 · 롯데 뇌물 SK 뇌물요구도 유죄 확정 대기업 상대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 사건 다시 심리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삼성과 최씨 사이 말 소유권 이전

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삼성과 박근혜(67) 전 대통령 사이 삼성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뇌물요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상대

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치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 민주 이춘석 의원, 응웬 베트남 재정예산위원장과 관계 증진 논의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응웬 득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산하위원장이 29일 오전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익산갑,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예방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열린 이번 면담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국회 기재위 수석 전문위원 등 고위 관계자와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산하위원 등 핵심 인사 12명이 참석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증진과 한국의 예결산 처리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 국회에서 재정예산 관련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양 위원장은 향후 한-베 상호간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리라는 데 공감하고, 건설적 경제협력관계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농민들과 소통, 현안 조속 해결을"

김중회 의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농해수위 김중회 의원(김제, 부안)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후보자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했다.

김중회 의원은 김현수 농림부장관 후보자에게 ▲ 장관 후보자로서의 소신 ▲ 문재인 정부 농업예산 확대 ▲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 과정의 문제점 ▲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불가 ▲ 보리수급 안정 방안 마련 시급 ▲ 생산조정제 대책 조속 마련 ▲ 감제 용지축산발집지역 대책 필요 등 농업의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본격 질의에 앞서 김중회 의원은 후보자에게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자가 아닌 공익적 기능의 창출자로서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업은 경쟁과 효율의 대상이 아닌 보호 분야인 만큼 농업인의 기능과 역할에 공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예산 관련,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20년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 3%



가 붕괴했음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중회 의원은 "농업을 확대하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3.7%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농업예산이 2.98%로 쪼그라들었다"며 "농식품산업 GDP 비중이 6%임을 감안하면,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예산의 5%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증액이 없는 직불제 추진은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최소 3조 5천억원의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공익형직불제 예산으로 2.2조원을 편성하였지만, 2017년에 지급된 논밭 직불금이 2조 5천억원이고, 소규모 농가에게 일일정액제를 지원해주려면 최소한 1조원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최소한 2조 5천억원"이

이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쌀 값 안정장치를 위해 자동시장격리제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며, 시장격리 시기는 수확기 이전, 물량은 신곡 초과공급량 이상으로 명시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2019년 보리 수매와 관련, "계약재배와 비계약재배 수매가 격차를 5천원 이내에서 생산량 전망을 조속히 수매 해 보리 재배 농가 시름을 덜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생산량 감축이 아닌 국내산 맥아공장 신설 등 소비 확대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중회 의원은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는 30년 이상 농업계에 근무하며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만큼, 농정수장이 된다면 농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시급한 농업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중회 의원은 전북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논란과 관련해 한 농대 타지역 이전 불가 를 재확인했고, 후보자로부터 "분교설치에 대한 전북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지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김진성 기자

## "일본은 가해자... 정직해야"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지 못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는 고노 외무상의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행정부 최고수반이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 한다면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의 시정을 주장한 바 있다.

전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나서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이해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이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를 취한 상황에 있다.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연계하는 주장을 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

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이 수시로 말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던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키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대고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

국회 정개특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골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을 강행해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표로 가결했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표결 처리에 강력 반발했고 홍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일제히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거친 몸싸움은 없었지만 고성이 오갔다.

특히 표결 시도를 전제들은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수의 의원들이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진입해 흥 위원을 강력 비판했다.

앞서 정개특위 안전조정위원회는 28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 강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정개특위 안전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당은 이와 별도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